
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12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2. 4.

발 의 자 : 한병도 · 김영배 · 정일영
김승원 · 이수진 · 이형석
이용빈 · 김민철 · 전용기
최기상 · 김민석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형사소송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법령을 위반한 정보주체에 대한 조사 등 제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후 공동이용의 목적 등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기산점에 검사의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3항).
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공소를 제기한 날 또는 입건이나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(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)”을 “공소제기를 한 날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제기·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[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(피의자중지) 결정은 제외한다]”으로 한다.

제43조제3항 중 “공소를 제기한 날 또는 입건이나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(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)”을 “공소제기를 한 날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제기·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[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(피의자중지) 결정은 제외한다]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p>③ (생 략)</p> <p>제43조(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)</p> <p>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제2항의 경우에 이용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<u>공소를 제기한 날 또는 입건이나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(기소중지 결정은 제외한다)</u>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④ ~ ⑥ (생 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3조(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)</p> <p>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 <u>공소제기를 한 날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소제기 ·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[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(피의자중지) 결정은 제외한다]</u>-----.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